

노동부, 2010년도 업무계획 발표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포함한 2010년 업무계획을 12월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2010년 노동부 업무계획은 크게 4가지로 나뉘게 된다.

먼저 위험성평가제도의 시범사업 실시다. 노동부는 노사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로의 점진적 전환을 위해 위험성평가제도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내 위험요인을 잘 아는 노사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 활동이다. 시범실시 대상은 제조, 건설업 등에서 3천개소로 예정되어 있다. 노동부는 이번달부터 본격적인 준비단계에 들어가 이르면 2010년 3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50인 미만 산재취약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와 공단은 2009년에 50인 미만 사업장 중 재해위험이 큰 사업장 10만개소를 선정하여 교육 및 기술, 재정 등을 지원해왔는데, 2010년에는 780억원을 들여 이보다 크게 늘어난 81만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올해 추진한 정책 중 가장 큰 성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이를 확대 시행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집중관리를 통해 최근 다소 늘어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마저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노동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세 번째로 자율적인 안전보건 문화의 확산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노사 단체와 공동으로 '1사 1안전 지키기 운동'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1개의 회사에서 1가지의 안전원칙을 반드시 세우고 이를 노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키자는 취지의 운동이다. 또한 노동부는 NGO, 노사단체, 업종별 단체 등과 협력하면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시키고,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문화를 더욱 확산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노동부는 서비스업 방문 안전보건 서비스, 산업간호사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통해 안전보건을 사회적 기업 및 일자리와 적극적으로 연계시켜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노동부 임태희 장관은 "2010년에는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다"라며 "특히 건강한 노사문화정착의 초석이 되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취업애로계층 일자리 지원', '일자리 창출 역량 극대화', '미래 대비 및 국격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0년 업무추진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2010년 보험료율 1.8%로 결정

노동부는 11월 26일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재보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도 산재보험의 업종 평균 보험료율을 임금총액의 1.80%로 결정하고 이를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9년 평균 보험료율 1.80%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산재보험 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최근 3년간의 임금총액 대비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 총액(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폐업사업장 보험급여, 산재예방 사업비 등 공통경비를 고려하여 61개 업종별로 구분해 고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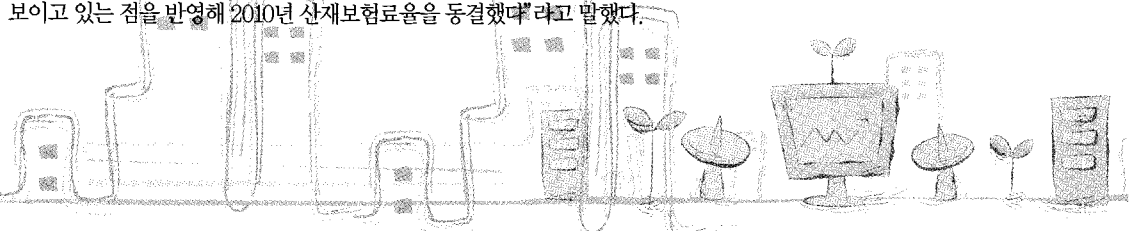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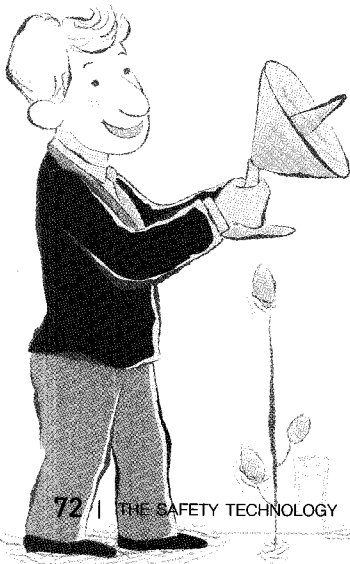
2010년 최저요율은 전문기술서비스업으로 임금 총액의 0.6%이며, 최고요율은 석탄광업으로 임금총액의 36.0%다.

전년도에 비해 보험료율이 인하된 주요 업종으로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4.2%(14.3%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2.5%(13.8% ↓), 전자제품 제조업 0.7%(12.5% ↓) 등이다. 반면, 전년도에 비해 인상된 주요 업종은 금속 및 비금속광업 23.6%(14.6% ↑), 화물자동차운수업 7.4%(10.4% ↑), 건설업 3.7%(8.8% ↑) 등이다.

인상률에 차이가 나는 것은 업종별로 보험급여지급률, 3년전 소멸사업장 보험급여 부담률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참고로 산재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일부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용 외에 매년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걷는 형식으로 충당하고 있다. 2010년 산재보험의 순지출 규모는 약 4조 6천5백억원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지출면에서 보험급여지급액의 증가율(07년 2.5%, 08년 5.5%)이 다소 상승하는 등 재정적 부담 요인이 있으나,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요율을 인상하면서 최근 재정수지가 비교적 안정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을 반영해 2010년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앞으로 체납보험료에 대해 징수율을 높이고, 산재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등 산재보험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체는 산업재해 발생정도에 따라 업종별 보험료율을 30%~50%까지 할증 또는 할인받게 된다.

노동부 ‘자율안전업체 지정요건 강화시킬 것’

2010년에 위험공사의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자율안전업체의 지정요건이 강화되는 등 건설안전과 관련한 일부 정책이 바뀔 전망이다.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 김양현 과장은 지난 12월 4일 열린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CSMA) 송년회에서 2010년 건설안전 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대형사고 위험공사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교량공사, 대형가시설공사의 안전기준이 새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특히 강교·콘크리트 교량공사의 안전기준은 노동부에서 이미 초안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현 과장은 “시스템비계, 동바리, 갱폼구조 등 조립방법이 없었지만 이번에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이번에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작업 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이 추진된다. 붕괴 사고가 많은 굴착 공사, 교량공사, 신기술 적용 공사의 경우 조만간 이 계획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가 개정될 전망이다. 특히 심사, 확인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에서는 시행령 규칙에서 몇 가지를 개선하는 형식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양현 과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 확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위험요인들이 발굴되고 개선될 수 있게끔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안전업체의 지정요건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평균 3년간 재해율’을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 ‘직전년도 환산재해율이 상위 20% 내’로 변경된다. 용어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로 변경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율안전업체에 대한 관리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다. 법위반과 무관하게 3명 이상의 동시 사망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지정에서 제외하고, 2명의 사망재해가 발생하면 다음연도에서 제외하는 형식으로 강화된다.

그밖에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서 도급과 관련해 ‘일부 도급’,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라는 단서가 삭제될 전망이다. 환산재해율에 대한 부작용 때문인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왔다는 점에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이외에 김양현 과장은 심사확인제도를 강화하고 확인주기도 단일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락, 붕괴 등 중대재해가 3명이상 발생하면 본사

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관람객들이 다수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대학로와 중구지역 소공연장 전체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지난 11월 ‘부산 사격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내 공연장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공연장에서 비상대피로 및 소화시설 미비 등 공연장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대학로와 중구지역 소공연장 200여 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점검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중부소방서가 합동으로 1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대상 공연장에서는 비상대피로 확보 여부, 화재감지 및 경보기 작동 여부, 전기배선 상태, 조명·음향 등 무대시설 등 공연장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게 된다.

한편 이번 점검과는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안전에 대한 규정 및 기준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공연장 등록범위를 현재 100석 이상에서 50석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공연장 등록 시 제출하는 재해예방조치계획서에 ‘소방 및 대피시설 관련사항’을 포함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연장 관리자의 안전 교육을 의무화시키는 등 공연장 안전관련 규정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자율안전관리업체 안전사고 강력 대처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민기 이사장이 11월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율안전관리업체에 속한 대기업들의 안전사고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뜻을 밝혔다.

노민기 이사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안전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해 나온 것이다. 최근 자율관리업체로 지정받은 업체 중 50%가량에서 사망산재가 발생하고, 이 중 대부분이 상위 5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자율안전관리업체의 부실을 주장하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노 이사장의 이날 발언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는 안전을 관리하는 문화를 계속 조성해나가기, 그에 따른 책임을 더욱 강조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자율안전관리업체 중 일부 대기업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사고 시에는 높은 과태료로 처벌하는 방안을 노동부와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

